시 론

냉엄한 한미관계와 당랑거철(螳螂拒轍)



오 수 열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한국동북아학회 이사장

조선(朝鮮)이 외부 세계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쇄국(鎖國)에 갇혀 있을 때인 1866년 7월 미국 소유의 무장상선 제너럴셔면호가 평안도의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통상을 요구하다가 관민(官民)들의 공격을 받아 침몰됐고, 이로 인해 5년 뒤인 1871년 미국이 이 땅에 첫 발을 디딘 신미양요(辛未洋擾)가 발생했다. 지금으로부터 155년 전의 일이다.

이처럼 그다지 좋지 않은 인연으로 시작된 한미관계는 1950년 6월 북한의 남침으로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 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미국이 국제연합군을 구성해 참전 결과, 지금의 군사분계선(MDL)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반세기를 지나면서 국제정세는 물론이고 한반도의 상황 또한 크게 변화됐다. 베트남전쟁의 여파로 미·중수교가 이뤄지면서 냉전체제는 붕괴됐고 한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국제적 위상 또한 높아졌다.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 한국의 총수출액은 4천만 달러 수준이었고,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였다.

지금은 어떤가? 2025년 기준 수출액은 7천97억 달러로 7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6천800달러에 달해 이른바 4만 달러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이른바 세계 경제규모 10위권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대국 지위에 오른 미국은 자유진영을 지키는 '경찰국가'의 임무를 오랫동안 자임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와 공산권의 해체 그리고 2000년부터 가속화 된 중국의 성장 등 국제관계의 변화와 함께 미국의 경제침체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 축소를 불가피하게 했다.

세계는 이미 다변화됐고, 미국의 한계는 우크라이나전과 이란 전쟁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제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더이상 유일한 골리앗(Goliath)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이제 한반도로 논의의 초점을 옮겨보자. 많은 사람들이 한국전쟁을 3년 간의 전쟁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본격적인 전투는 1년 정도였고 남은 기간은 중립국가들의 중재로 판문점에서 정전을 위한 회담이 진행된 가운데 38도선을 중심으로 밀고 밀리는 살상전이 전개됐다.

결국 1953년 정전협정 체결을 앞두고 당시 이승만 정부의 최대 과제는 협정 체결 후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를 막는 것이었고, 그 결과물이 「한미방위조약」이다. 전쟁 중 한국군의 작전권 이양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정전 후,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내외 여건과 상황도 많이 변화됐다. 경제력은 세계 10위 권, 군사력은 6-7위 권이라는 나라가 작전권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조건이 없지 않다. 첫째, 북한이 남한과의 '평화적 공존'보다는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우리 경제가 대외 의존형이며, 특히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우리의 자주적 작전권 행사를 위한 협상과 경제외교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미간에 관세와 대미투자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의 비중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입국사증(VISA)을 발급하지 않아 양국간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의 고사성어에 당랑거철(螳螂拒轍)이 있다. 다의적(多義的) 성어이지만 사마귀가 다가오는 수레를 피하지 않고 맞선다는 뜻으로 자기보다 힘센 자에게 겁 없이 대드는 것에 쓰인다.

언제부터인가 정치인들의 언사에서 미국의 겁박에 대드는 것이 곧 자주(自主)이고 애국인 것처럼 내세우는 경우가 없지 않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황과 여건이 많이 바뀌었으니 한미관계 또한 당연히 변화돼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와 한미 간에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수(常數)가 존재하고 있다.

냉전 시대와는 또 다르게 북·중·러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남북대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한미동맹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체제에서 미국과 마찰음을 내지 않는 나라가 있는가!

바라건데 정부는 사소한 이견과 갈등을 넘어 안보와 경제라는 두 목표를 향해 대범하게 항진(航進) 해 주길 기대한다.

社 說

준공 후 방치된 환경시설, 책임소재 밝혀야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광주지역 환경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잇따라 지적됐다. 먼저 광주천 수질 개선을 위해 7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 시설이 준공 후 수년째 가동되지 못하면서 예산 투자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더욱이 기술 검토가 잘못됐다는 광주환경공단의 설명까지 나오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책임 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만약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이 기술적 한계가 있는데도 추진됐다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제라도 사업 추진 단계부터 사후 관리 등 행정 전반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 봐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 8월 준공된 광주천 혼합응집시설이 지금까지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수질 개선을 위해 약 70억원이 투입됐지만,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준공 이후 사실상 방치돼 왔다. 심지어 현재까지 광주환경공단에 정식 인계도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다 광주환경공단측이 당초 기술 검토가 잘못됐고, 현재 기술로는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 가동하려면 약 100억원의 추가 예산이 든다고 밝힌 점은 가히 충격적이다.

이제라도 70억원이 투입된 사업을 추진할 당시 기술적인 검증과 함께 문제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지 여부와 책임을 누가 감당해야 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여기에다 1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

악취 관리시설의 실효성도 비슷한 상황이다. 제1하수위생처리장 악취방지시설에 약 45억7천만원을 투입했지만 복합악취 측정값이 지난해 4분기 208에서 올해 2·3분기 448로 두 배 이상 상승했다. 법적 허용기준인 500 이내라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 기준 이내의 판단에서 벗어나 자체 관리기준을 마련해 실질적인 악취 저감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

광역위생매립장 무인 악취 측정·자동포집기의 표시 방식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전남광주시는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시설별 가동 실태를 들여다 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데 주력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환자 급증 사전 예방이 최선이다

최근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인플루엔자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광주·전남 지역 병의원 마다 감기와 독감 등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철저한 사전 예방이 절실하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44주차(10월25-31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천명당 22.8명으로 전주 19.2명보다 3.6명 늘었다. 42주차 17.7명 이후 2주 연속 증가세다. 더욱 우려된 점은 소아·청소년층의 높은 발생률이다. 7-12세 1천명당 비율은 60.9명으로 가장 많았고,13-18세 37.4명, 1-6세 33.1명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223곳의 인플루엔자 입원환자도 44주차 461명으로 전주 389명보다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4명의 2배가 훌쩍 넘는 규모다.

지역 의료기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비인후과와 아동병원 곳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기침을 하는 환자들로 넘쳐 났다. 더욱이 문제는 환자 대다수가 한 사람의 감염으로 인해 가족 전체로 확산됐다는 점에서 개인 차원의 예방을 넘어 공동체 차원의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무엇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올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4세 이하,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물론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 감염 자체를 막아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감염에 따른 중증화와 합병증 위험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접종을 미루거나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다 외출 후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실내에서는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 방문하기 등 작은 실천을 꾸준히 지켜야 한다. 호흡기 방역수칙은 나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기본적인 생활습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 고

한빛 건식저장시설, '보상'보다 '신뢰'의 설계가 먼저



김 봉 철
조선대 명예교수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영광과 고창에서 한빛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계획 초안에 대한 설명회와 토론회가 모두 일곱 차례나 열렸다. 750명 가까운 주민과 방청객이 참석했고, 43건의 질의가 이어졌다. 필자도 한 차례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했다. 설명회 자료와 토론회 현장에서 필자가 주목한 것은 질문 아래 깔린 정서였다. 주민들은 "안전한가"를 묻고 있었지만, 실은 "믿을 수 있는가"를 묻고 있었다.

건식저장은 1980년대부터 국내외에서 수십 년간 운영된 기술이다. 그러나 주민의 불안은 공학적 설명만으로 풀리지 않는다. 특히 2050년 이전 중간저장시설 운영이라는 국가 목표가 법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로만 담겨 있다는 점은, 방폐장 부지선정이 거듭 난항을 겪어온 과정을 지켜본 주민들에게 임시시설의 영구화라는 우려를 남긴다. 저장용량과 설계수명 발생량의 산정 근거를 두고 주민들이 되묻는 것도, 숫자 자체보다 그 뒤의 의도를 의심하기 때문이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서는 정확한 수치조차 설득력을 잃는다.

한빛이라는 장소의 기억도 무겁다. 과거 한빛 5호기 일부 부품의 품질서류 문제와 2019년 1발전소 사건을 기억하는 주민들은 당시 문제가 적시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러한 기억이 남아 있는 한, 아무리 정교한 안전 설명도 사업자의 일방적인 홍보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지역지원 문제도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한빛본부는 행정구역상 영광에 있지만, 도경계를 맞댄 고창 주민들은 원전과의 근접성, 해양환경에 대한 우려, 관광과 어업에 미칠 영향 등을 들며 부담은 함께 지는데, 지원은 영광에 집중된다고 호소한다. 고창 일부 지역에서는 반경 5㎞라는 거리 기준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영광 안에서도 인접 주민과 군 전체 사이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됐다.

물론 지원 범위를 무한정 넓힐 수는 없다. 반경 30㎞까지 일률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도 재정적 부담과 배분의 형평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준위위원회는 고준위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시설계획 수립자(한수원) 및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저장용량과 운영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정하고, 인구와 거리 등을 반영해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기준의 유무가 아니라, 그 기준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적용되느냐다.

갈등관리의 관점에서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지원은 '보상'이 아니라 '책임 분담'으로 설계해야 한다. 안전은 돈과 거래될 수 없다. 지원의 범위와 방식은 행정 경계에만 얽매이지 말고 실제 영향과 주민이 감수하는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 구조에서 합리적인 배분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 경계에 걸친 원전이라는 한빛의 특수성을 제도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둘째, 주민이 직접 확인하는 감시체계가 필요하다. 방사선량과 온도 등 시설 운영정보의 실시간 공개, 주민 참여형 상설 감시기구, 지역 환경감시센터의 독립성 강화는 지원금 못지않게 중요한 신뢰의 기반이다. 건식저장시설 건설부터 운영 전단계에 걸쳐 주민이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사업자의 설명도 설득력을 얻는다.

셋째, 반출 약속을 점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고준위위원회는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의 진척을 정기적으로 주민에게 공개하고, 일정이 지연될 경우 주민에게 알리는 체계가 있어야 영구화 우려를 덜 수 있다.

이번 설명회와 토론회 및 공청회가 형식적인 것이었는지는 한빛본부가 주민 의견을 최종 시설계획에 얼마나 담아내느냐로 판가름날 것이다. 또한 주민의견에 대해 고준위관리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 등 각 기관의 책임영역에서 어떻게 주민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고민하고 주민 입장에서의 과감한 대안이 제시될 것을 기대해본다. 갈등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더 나은 결정에 이르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신뢰로 채우는 일이 지금 한수원과 정부의 몫이다.

그래픽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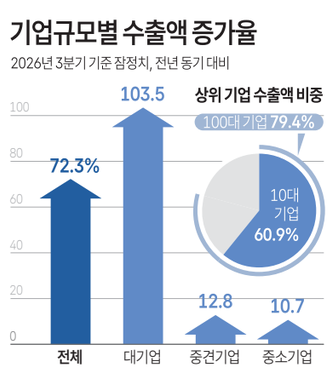
'반도체 날개' 대기업 수출 2배 이상 늘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3분기 대기업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전체 수출에서 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60%를 넘어섰다.

10일 국가데이터처와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3분기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수출액은 3천18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2.3%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수출액이 103.5% 급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이 대기업에 집중된 가운데 반도체 수출 호조가 실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자릿수에 머물던 대기업 수출 증가율은 작년 4분기 10.4%에서 올해 1분기 53.9%, 2분기 81.7%로 높아진 데 이어 3분기에는 세 자릿수대까지 치솟았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은 각각 12.8%, 10.7%에 그쳤다. 중견기업은 전분기(10.8%)보다 증가율이 높아졌지만, 중소기업은 전분기(12.7%)보다 상승 폭이 축소됐다.

대기업 수출은 반도체 등이 포함된 IT부품과 광산물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반면 내구 소비재 등에서는 감소세를 보였다. 중견기업은 화학공업제품과 비내구재 소비재, IT부품 등에서 수출이 늘었다. 중소기업은 기계류와 화학공업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수출 상위 기업으로의 쏠림 현상도 뚜렷해졌다.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 비중은 60.9%로 전년 동기보다 20.3%포인트(p) 상승했다. 올해 1분기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데 이어 두 분기 만에 60%선마저 돌파했다.

/연합뉴스

독자투고

장난 속 숨겨진 학교폭력 주의깊게 대응해야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야차룰', '스파링', '싸지' 등 신종 학교폭력이 번지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야차룰로 뜨자"라는 은어는 곧 1대1 결투 제안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가 몹시 위험한 이유는 물리적 폭력 그 자체에만 있지 않다. 폭력을 단순한 '놀이'로 부르거나 '서로 동의한 일'로 교묘히 포장해, 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가볍게 여기게 만든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107건에서 2025학년도 223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에만 160건이 심의되는 등 갈수록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처음에는 장난이나 놀이처럼 시작되지만 이내 한 학생이 거부하기 힘든 강압적인 분위기로 흘러간다. 중단을 요구해도 폭행이 이어지고 주변 학생들은 이를 촬영해 공유하며 2차 가해를 가한다.

형법상으로도 이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학생들끼리 사전에 아무리 신체적 폭력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엄연한 범죄이며 처벌 대상이라는 뜻이다.

폭력은 이름을 바꾼다고 장난이 되지 않는다. 청소년들의 언어와 놀이 문화가 교묘하게 진화하는 만큼, 이를 대하는 어른들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신종 폭력을 '친구들끼리 합의하에 한 장난'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김수연 장흥경찰서 읍내지구대〉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瀕皓 사장·발행·편집인 崔宰豪 주필·이사 朴恩成 편집국장 崔權範
(우)616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정치부 650-2030 경제부 650-2050 사회부 650-2040 문체부 650-2065 지역특집부 650-2060 사진부 650-2080 논설실 650-2006 TV본부 650-2009 서울지사(02) 786-9488 광고문의 650-2099 마케팅본부 650-2070 경영지원국 650-2011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